

FTA타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미 다 끝났다. 다만 그 대책 안이 제대로 마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닭고기는 FTA와 관련해서 총 27개 품목이 대상으로, 양허세율은 평균 20% 내외다. 양허기간은 대부분이 10~12년 정도이다.

현재 닭고기 수입규모는 2010년 기준 국내 소비량의 20% 규모인 약 10만5천톤 정도로 FTA로 인한 닭고기 업계의 피해규모는 관세를 철폐하는 해를 기준으로 연간 331억원으로 농경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의 60% 정도를 점유하는 국가로 FTA 타결 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닭고기 산업은 계열화사업에 힘입어 지난 30년 동안 빠른 성장을 해왔으며 아직도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보면 지난 2000년 6.9kg에서 2010년에는 10.7kg으로 거의 배 이상 성장했다. 닭고기 생산량도 2000년 26만1천톤에서 2010년에는 43만6천톤이 생산됐다. 마리 수로는 7억2천5백만 마리가 생산·도축됐다.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고단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닭고기는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또한 생산측면에서도 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있어 쇠고기는 7.0~8.0kg, 돼지는 3.5~4.0kg의 사료가 소요되는데 비해 닭고기는 1.5~2.0kg

의 사료만을 필요로 하고 있어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FTA의 타결로 닭고기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외국의 파상적인 공세에 맞서 충분한 방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FTA 타결에 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지원부문과 제도개선부문 등 총 16개항을 건의했다. 그 중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 소비·유통분야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생산부문에서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우선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축사시설현대화다. 정부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육계사육농가 1,800호중 당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45%인 800여 농가다.

농가당 자금지원 규모(6만수기준)를 7억원 정도만 5,600여원이 필요하지만 올 육계시설 개선사업의 사업 규모는 68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제고해 봐야 할 상황이다.

또한 불합리한 각종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닭고기 산업에 외국산 수입 닭고기에 맞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산비를 절약하는 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도계장 등 3D업종은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용 상한선을 강제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도축장 내 도체품 검사 업무도 검사의 실효성을 배제한 채 관행에 따라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내부도 문제다.

FTA, DDA 등 시장 개방화시대에 내부에서의 갈등은 국내 닭고기 산업을 어렵게 만들 가장 큰 적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과잉입식 등 불필요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 되면서 계열주체가 부도나고 었어지는 사태가 몇 년 주기로 재발되고 있다.

또한 이 영향은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전가되고 농가들은 또 계열주체를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분명하게 끊어줘야 한다. 마침 정부도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계열화사업법이 농가와 업체 그리고 업체와 업체간 상호 공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